

아베정권의 압승과 경제정책

-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변경으로 유아교육·보육의 무상화 등 인재육성혁명의 구체화가 초점이 되고 있는 한편, 사회보장비 억제 등 세출개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제로 되고 있음
-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으로서 2020년도까지 3년간을 「생산성혁명·집중투자기간」으로 설정하여 생산성향상의 구체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, 그 간판격이 노동 방식 개혁임
- 통상 분야는 중원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여당의 압승으로 아베정권이 미국을 제외한 TPP를 추진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
- 에너지정책은 종래의 방침대로 균형 있는 에너지 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게 될 것임

- 아베 일본 총리가 10월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음
-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본주식시장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음
- 또 아베정권이 확고해짐에 따라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노선도 계속될 전망이다
-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가운데,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미일금리차를 배경으로 엔저·달러고 경향이 계속될 공산이 큼
- 이하에서는 아베정권의 재집권에 따른 당면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봄

□ 소비세 증세, 세출개혁

- 중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영향을 받아 아베 정권의 경제재정정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
 -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변경으로 유아·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인재육성혁명의 구체화가 초점임

- 그러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, 사회보장비 억제 등 세출개혁이 과제로 되고 있음
- 생산성향상이나 규제개혁을 발판으로 성장전략의 재정비도 필요함. 요는 정권의 개혁 추진력이 문제임
- 아베 총리는 인재육성혁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중에 2조 엔의 정책 패키지를 마무리할 계획임
-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 10% 인상으로 얻어지는 5.6조엔 중 1.7조엔 전후에 대해서 국가의 차입금감액이 아닌 세출확대에 충당함
- 일본경제신문(2017.10.23.)에 의하면, 아베 총리는 TV방송에서 "인구감소대책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. 정책패키지의 재원을 보이고 있어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"고 강조하고, 중원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며 구체화에 탄력을 붙일 생각임
-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TV방송에서 법률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리먼 쇼크 급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율을 인상한다고 말함
- 패키지에서는 0-2세의 보육원은 저소득세대에서, 3-5세의 유치원과 보육원은 전 세대에서 무상화 함
- 고등교육을 둘러싸고는 급부형장학금이나 수업료의 감면제도를 확충하고 부모의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생각임
- 아베 총리는 10월 22일 방송에서 용도변경에 의한 재정건전화의 후퇴가능성에 대하여, "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차입금은 절대로 상환할 수 없다. 투자해야할 것은 투자 하면서 재정건전화를 꺾하고 싶다" 말하는데 그침
- 아베 정권이 재정건전화에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디까지 세출개혁을 추진할 것인가가 시금석이 됨
- 중원 선거에서 「전세대형사회보장」을 내세운 아베 총리가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강화의 한편으로, 고령자에 편중된 급부나 서비스의 삭감에 파고들 수 있을지가 초점임
- 그러나 아베 총리는 10월 22일 방송에서 연금이나 의료도 확충해나간다고 말함

- 예산편성의 최대 초점은 진료보수와 간병보수의 동시개정임
 -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진료보수의 본체를 마이너스 개정하면,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됨. 이에 대하여 일본의사회 등 업계단체는 플러스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
- 재정에서는 2018년 6월 완성할 재정건전화목표 개정도 중요함
 - 소비세 인상분의 용도를 재검토하여 교육 등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2020년도에 기초적재정수지(프라이머리 밸런스)를 흑자화하는 목표를 뒤로 미루기로 함. 다음 목표년도를 어디에 정하는가가 초점이 되고 있음
-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 정조회장은 10월 22일 방송에서 달성목표는 확실하게 앞으로도 내세워야만 한다고 말함. 다만 목표년도가 늦어지면 일본의 재정운영의 신인도는 흔들릴지 모름
- 2025년에는 단카이(團塊)세대(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)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어 간병이나 의료 등의 급부비가 급증하게 됨.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현역세대의 부담이 늘어나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
 - 일본정부는 2018년도까지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연간 5,000억 엔으로 억제하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높은 세출삭감 계획을 내걸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

□ 생산성, 성장전략

-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으로서 2020년도까지 3년간을 「생산성혁명·집중투자기간」으로 설정.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생산성향상의 구체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
-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사원교육을 확충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감세를 검토하고 있음. 기업의 인재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으로 높일 계획임
 - 인공지능(AI)이나 로봇의 도입에 빼놓을 수 없는 IT인재의 육성 등도 과제임
- 일본은 2017년 4-6월까지 6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실현했음. 그러나 경제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중 최저수준에 그치고 있음.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안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임

- 아베정권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갖게 되는 선순환도 기대하고 있음
 - 아베 총리는 10월 2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기업이 더욱 임금인상에 노력해주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싶다고 말함
- 자동운전이나 드론, 핀테크 등 차세대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환경정비에도 주력. 규제를 동결하여 실증실험을 추진하기 쉽도록 하는 샌드박스제도를 국가전략특구 등에서 실시할 계획임
- 다만 특구를 통한 암반규제개혁은 중원선거의 영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. 국제금융도시를 위한 특구를 활용해온 코이케 유리코(小池百合子)동경도지사가 희망당 대표로서 정권비판의 톤을 높였기 때문임
- 아베정권의 간관정책의 하나인 노동방식 개혁에도 중원선거의 영향이 나타날지 모름. 여당이 중원정수의 2/3를 확보, 관련법안의 심의·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음
 - 한편, 금년 중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내년 통상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2019년 4월 예정인 시행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
- 노동방식 개혁은 잔업시간의 상한규제나 비정규지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동일 노동·동일임금의 도입이 핵심임. 노동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 8가지 법률을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임
- 나아가 관련 법안은 시간이 아니고 성과로 평가하는 탈시간급제도의 도입도 포함하고 있음.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나 이제까지 야당의 반대로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음

□ 통상, TPP

- 통상 분야는 중원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여당의 압승으로 아베정권이 미국을 제외한 TPP를 추진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
- 11월 상중순에 일본은 2개의 고비를 맞게 됨
 - 하나는 11월 6일 일본에서 미일정상회담. 또 하나는 11일의 APEC정상회담에 맞추어 개최되는 TPP정상회담임


- 자민당의 기시다 정조회장은 10월 22일 방송에서 미일관계를 안정시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, 신뢰관계에 기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함
- 미국 측은 10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경제대화에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에 의욕을 보임. 트럼프 대통령은 2국·지역간 협의에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미FTA에 신중함
 - 2국간 협의는 농업분야 등에서 TPP를 상회하는 양보를 해야만 할지도 모름
- 일본이 중시하는 것이 미국을 제외한 TPP11임.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TPP정상회담에서 큰 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TPP11이 합의가능하면 미국 측이 관세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미국이 장래 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
 - 그러나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일FTA교섭을 요구해오면 일본은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어 어려운 대응이 예상됨
- 더욱이 TPP11에도 암운이 떠돌고 있음. TPP11의 조기합의를 일본과 함께 추진해 왔던 뉴질랜드에서 정권교대가 일어날 전망이어서 신중한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임
- 10월말에는 TPP11의 사무레벨회의가 예정되어 일본은 그 장에서 영향을 지켜볼 생각임

□ 에너지, 원전재가동

- 중원선거의 여당압승으로 에너지정책은 종래의 방침이 계속될 전망이다
 - 2011년 동경전력·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이후, 일본 국내 원전이 정지되어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으나, 균형 있는 에너지 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게 될 것임
- 전체 발전량에서 점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2016년도 2%, 아베 정권하에서 2015년까지 완성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는 2030년에는 이를 20-22%로 높일 계획임
 - 현 시점에서 가동하고 있는 5기에서 30기 전후로 높일 필요가 있음
- 다만 재가동에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거후에도 마찬가지임. 재가동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

- 동경전력의 가시와자키 카리와(柏崎刈羽)원전 6, 7호기는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사실상 합격했음
- 그러나 니이가타(新潟)현의 요네야마 류이치(米山隆一)도지사가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독자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재가동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
- 동경전력의 정보은폐 등도 있어 여론은 원전재가동에 신중함. 정부와 전력회사가 안정성 확보에 힘을 다한 후에 어떻게 주민의 이해를 얻을 것인가가 열쇠를 쥐고 있음
- 일본정부는 금년도중 에너지계획의 개정안을 완성함.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 이후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
- 경제산업성의 유식자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되나,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약 80%. 지구온난화대책이나 연료조달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에너지 구성은 밸런스가 좋지 않음.
-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확대는 물론, 신증설을 포함한 원전의 방식을 장래 에너지상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

□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

- 아베정권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
- 일본의 정권 자체가 바뀌지 않았고, 이미 한일 관계가 밑바닥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임
- 다만 아베총리의 재집권을 통해서 과거사 문제, 독도문제,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등에서 일본의 여론을 장악하려 하는 일본의 우익, 보수들의 기반이 강화되는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
- 반면, 동북아 안보협력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한일 양국이 대북압박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임
- 한편 아베정권의 압승으로 아베노믹스가 재기동되는 경우 엔저와 함께, 이제까지의 대기업·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최소한 유지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. 

< 참고자료 >

일본경제신문(2017.10.22, 23, 24)